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 계 요 구

제 목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북구

훈계대상자 ① 광주광역시 북구 ○○○동 지방○○○○○ ○○○
(전 ○○과 지방○○○○)

② 광주광역시 북구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4. 7. 21.부터 2016. 7. 17.까지 지방○○○○○
○○○은 2010.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
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
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 대외비 등의 자료가 사업장에 남
아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1. 원격접속 허용 등 사업관리 부적정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2015년 ○○○○○○시스템 구축사업⁵⁰⁾ 추진시 과업지시서에 위 관서 전산실에 인력이 상주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구)전자문서 자료(구 전자문서, 신 전자문서)를 ○○○○○○시스템으로 이관작업이 방대한 자료 및 오류검증, 파일변환 등 이관 단계의 여러 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관 작업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외부(사업자 사무실)에서 내부 단말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자료이관 작업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2015. 8. 10.부터 2015. 11. 10.까지 사업자에게 원격접속을 허용하였다.

또한 사업종료 후 하자보수 기간인 2015. 11. 11.부터 2015. 12. 31.까지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10년 이하 구전자문서”를 이관작업하기 위하여 원격접속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는 원격 접속을 사업자에게 허용하면 작업인력이 자료이관 작업을 위해 위 관서 전산실을 방문하지 않고 사업자 사무실에서 작업을 할 수 있어 실제 투입인력이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할 뿐 아니라 투입 공수에 따른 투입 원가를 산정 하지 못하는 등 사업자에게 인력 투입 등에 대한 특혜가 제공되는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사업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처분 등 행정처리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원

50) 사업기간 : '15. 6. 25 ~ 10. 23. 사업비 : 360,226,000원, 사업체 : (주)○○○○○

격접속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사업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2.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장 정보보안 업무 추진 부적정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영구, 준영구, 대외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내부분서 자료에 대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구축사업이 종료되면 정보보안을 위하여 사업자가 작업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하고 사업자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며,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IP 주소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개인정보, 대외비 등의 자료가 남아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담당 부서에서는 정보보안 업무에 미숙하여 사업종료 후 사업체로부터 보안확약서는 받았으나 원격접속으로 자료 이관 업무를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내부 자료에 대하여 파기 등 정보보안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내부 자료가 유출 될 가능성이 있도록 방치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복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